‘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 전북 찾은 민주 이재명 대표

“어려운 시기, 억강부약해야”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6일 정읍 소재 가축시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사진기자단 공동 취재>

정읍 축산농업인 간담회서 민생고 지적
“국정 방향 거꾸로 가… 희망 세상 만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북 정읍에서 난방비, 물가 인상 등 민생고를 지적하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엔 억강부약 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이 정읍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축산농업인 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국정 방향이 모두 함께 사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거꾸로 가는 게 없잖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예산 심의 당시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 난방비 문제도 심각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도 힘들지만 생산자도 높은 물가 때문에 생산비가 오르고 가격이 올라 판매가 안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위 초대기업,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버는 특수기업은 엄청난 영업익을 거두는데 이럴 땐 예상 외 이익 영역에서 부담금을 걷어 고통을 보전해 주는 게 맞잖나”라고 봤다.

아울러 “그게 바로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론 반대로 했다”며 “초대기업 세금 깎아주는 일부터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대정부 비판 목소리를 냈다.

또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고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고, 절망적 상황이긴 해도 희망을 만들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한병도 의원은 정부의 올해 탄력 관세 운영 계획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영향 소지를 짚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대안을 세울 것은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축산 농가에 대해 “사료 값이 오르고, 소 값은 떨어지고, 그간 대출 받은 비용은 고금리로 부담이 커지는 삼중고를 겪는다”며 대안, 해법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원택 의원은 “정부가 농민 추가 대책,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게 소 값 파동의 도화선이 된 것”이라는 등 비판 주장을 내놓았다.

또 “걱정하는 대목은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위험해 시정해 달라고 재정 운용계획 변경을 요청했는데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농업인 측에선 “폭설로 도내 많은 지역에서 축사, 하우스가 무너졌지만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란 이유로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복구비가 지원되는 게 현실”이라는 등 토로가 나왔다.

또 “민생 탐방 한 번의 행사로 그칠 게 아니라 정책, 법안으로 완성되는 데 성원과 지원을 해 달라”며 “이런 행동의 결과가 누적될 때 여야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선 축사 농가와 가축시장을 찾았다. 여기서 이 대표는 “사료 값이나 축산 비용 증가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는 등 우려를 표했다.

이번 일정은 이 대표의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역 일정을 지속하면서 지지 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울산 머큐어 앰버서더 호텔에서 2023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 지원 지자체별 조례 운영 표준화 미흡”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서
“지속가능 운영 위해 법률 제정 · 종합계획 수립해야”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26일 울산시(머큐어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농번기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법무부 지침과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 정도의 최소한의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표준화되지 않고, 지자체별 현장의 상황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추진부처이지만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관련 업무가 산재해 있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명확한 주관부처를 설정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단기 ·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를 보면 전국 124개 지자체에 2만 6,788명이 배정됐고 전북은 13개 시군에 2,660명이 배정됐다. /김재훈 기자

올해 입학 초등생 필요 물품 구입비 지원

장연국 도의원, 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발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지난 25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한 목적으로 “2023년 입학하는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입학 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생을 격려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하는 등 균등한 교육복지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하여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 특수학교(초등과정) 1학년 입학생으로 2023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23년 기준 초등학교 입학생은 약 1만2,792명으로 학생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면 약 38억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장연국 의원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 전라북도의 모든 학생 한명 한명이 다 소중하다”며, “전북의 미래자산인 우리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끝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중 ·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어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육청과 인천교육청 그리고 광주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신입생 등에 대한 입학준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전국 약 7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출발 위한 초석 다지기

도, 첫 세미나 열고 정책 방향 논의… 미래먹거리 발굴에 중지 모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7일 공포된 가운데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발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향후 100년, 1000년을 이어갈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도?시군?의회?출연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과제 등 여러 사례를 공유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도 이어졌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제주연구원 윤원수 책임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와 한계, 과제(대전 · 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 △강원특별자치도 방향과 과제(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센터장) 등 타 지역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전북도에서는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부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현황 및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북연구원 원장(권혁남)을 좌장으로 이병기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소준노 우석대학교 교수, 이동기 원광대학교 교수, 이경재 전북애향운동본부 사무처장, 강태창 전북도의회 의원, 민선식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방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설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전라북도의 광활한 새만금을 연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전북이 선점하고 있는 탄소산업과 수소산업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북의 강점인 농업을 활용해 미래를 이끌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특히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도민들이 염원하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했다”며, “전북의 고유성을 갖춘 비전을 설정하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김호서 전주을 예비후보
“민주당이 현명한 판단 해주길”

오는 4월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전주을 재선거에 나선 무소속 김호서 예비후보가 무공천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단의 전북 방문 시작일인 2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의 전북도 방문에 깊은 환영 인사를 한다”면서도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여기서 ‘현명한 판단’은 민주당을 탈당한 후보군 등이 이번 민주당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는 이번 재선거는 전주시민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뼈아픈 사건으로 전주에는 김호서가 꼭 필요하다”면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지역을 잘 아는 후보, 3년의 공백을 1년 만에 메울 수 있는 후보, 그리고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뉴시스

오늘 ‘전북자치도 과제 · 전략’ 세미나

자치행정학회 주관 · 도의회 후원… 제도적 총론 등 총 6회 진행

한국자치행정학회(회장 김경아)가 주관하고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후원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제정: 전북자치도의 과제와 전략’ 세미나가 2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한국자치행정학회와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계기로 관련 주요 과제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 기획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날 첫 포럼을 마련한다. 이번 기획포럼은 제도적 총론, 자치 분권, 규제 완화, 재정 효과, 지역개발 혁신 등 총 6회로 진행된다.

이날 포럼은 홍준형 서울대 명예교수(前 서울대학교 국가전략 위원장)와 이병현 김제시의회 정책지원관이 발제자로 나서며, 국주영은 의장을 좌장으로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와 조성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재호 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배경과 전라북도의 주요 현황,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주요 성과와 과제, 제주 · 강원 · 전북특별자치도법 비교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방향에 대해서 논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어왔으며, 정부의 ‘초광역메가시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됐을 뿐만 아니라 제주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제정 필요성이 크게 부각돼 마침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됐다.

하지만,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특례조항을 신설해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며 시작된 제주특별법과는 다르게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선언적인 의미의 법이 제정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법 시행을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5년 창립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행정학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학술 활동을 수행해 왔다.

‘전북 특별자치’ 기획포럼 향후 일정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30일까지 모집

행정 · 복지환경 등 4개로 분야별 2명씩 채용

전주시의회가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을 모집한다.

정책지원관은 지방행정 7급 일반임기제로 원서모집은 26~30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는 전주시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의회 누리집(https://council.jeonju.go.kr/) 의회소식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분야와 인원은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 등 4개로 각 분야별 2명씩 모두 8명을 채용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2월 중 개별 통보하고, 1차 합격자에 한해 같은 달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2차 면접시험을 진행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충원할 수 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더 커진 만큼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능력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